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둔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 하 현*

〈목 차〉

- | | |
|----------------------|-----------------------|
| I. 한국경제의 최근 현황과 정부정책 | III.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과 대책 |
| II. 잠재성장률 둔화 시 문제점 | IV. 결론 |

〈요 약〉

GNI 증가율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한국의 저성장이 장기추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례적인 원화절상이 수출에 타격을 주어, 국내 주력산업인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생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마저도 투자를 미루고 있다. 지속되는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 원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강조한다. 첫째,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여 노동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R&D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자본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여 자본 확충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가계소비도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발달되지 않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의 저해가 되는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저성장론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이러한 단기계획 뿐 아니라,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잠재성장률, 노동생산력, 자본생산성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hahyunjo@hanmail.net

I. 한국경제의 최근 현황과 정부정책

금융위기 이후 3년째 침체된 경기는 회복하기도 전에 그 체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GDP 증가율도 낮지만, 국민의 실질구매력과 직결되는 GNI 증가율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산업생산은 4월부터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이 전월대비 대폭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과 같은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6월에 들어서는 전체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1%로 증가했지만 5월의 실적이 워낙 저조하여 증가율이 수치가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근래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에 의한 결과이기도 한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이례적인 속도의 원화절상이 한 몫을 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애도분위기로 레저 및 공연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마저도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어 하반기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작년부터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수출도 늘고,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도 늘고, 이어 가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도 진작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러나 앞선 통계청 발표는 이것이 선부른 기대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선순환의 행보를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기가 강하게 회복되지 않았기에 앞서 말한 경제의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치며 ‘소비증진’과 ‘투자촉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다. 수출 드라이브정책으로 성장한 한국은 내수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주춤할 경우 타격이 크다. 따라서 정책방향 보고에 따르면 내수안정화를 위해 가계소득향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민생안정정책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지만, 정부는 이로써 가계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시행된 LTV·DTI 규제완화도 내수활성화정책의 일환이며 이러한 행보들을 통해 오랫동안 침체된 성장세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먼저 꺼내든 카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이다. LTV·DTI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늘려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은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를 뜻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파악하여 그 중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거래량이 전년 동월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선 정부가 대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들의 빚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올해 1,000조를 넘어서면서 지난 5개월 연속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로 경제에 악재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을 막는 원흉이 되므로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대출심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경제팀이 꺼내든 또 다른 카드는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고용도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낙수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사내유보금은 1990년을 기준으로 22년 새 29배 늘었다. 또한 2005년~2011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금 평균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2.4%로 세계주요국 기업의 현금배당성향이 미국(37.8%)과 일본(33.6%)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렇게 국내 투자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해외투자만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어 해외에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 내 쌓아놓은 현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적으로라도 기업이 돈을 투자에 활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금융권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사내보유금을 소비하려면 투자나 배당을 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 대신 배당으로 사내보유금을 소비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시가총액 20대기업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44%에 이르는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사내유보금 과세로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배만 불러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강제로 시장주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 강제적인 과세방안 보다는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정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 통화유통량이 늘어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초단기 예금에 낮은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기

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시중은행에 돈을 예치한 예금주들은 오히려 예금의 보관 비용을 지불하는 격이다. 이는 그만큼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의지가 확고함을 뜻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필요성도 커졌다.

만약,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시중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비싸져 환율은 하락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유례없이 원화절상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이미 무역을 통한 이익분기 환율인 1,052원도 넘어섰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율하락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소비 감소의 주된 이유가 원리금 상환부담이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대출 금리도 인하되어 가계의 소비여력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II. 잠재성장률 둔화 시 문제점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2012년부터 3년간 지속된 장기침체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사이 마이너스 갭이 발생하면 경제가 자기능력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러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중장기 성장 추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4.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현재에는 3.8%로 급락했다. OECD는 지금 3%대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 동력의 부족으로 어느 순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자리 및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가증될 것이며 둘째, 세수차질을 야기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우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물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3가지 요소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직전의 모습과 닮아있다. 한국의 국내총생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둔화, 문제점 해결방안

산(GDP) 순위가 2008년 이후 6년 동안 15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이미 잃어버린 17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강현숙, 경기일보 경제일반 2014년 8월 14일자). 따라서 우리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다.

III.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과 대책

1. 노동생산성 측면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56위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증가율 자체는 미국, 일본에 비해 높지만 증가속도의 둔화는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물론, 인구변천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의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이다(허문구 외 3인, 2014). 70년대에 비하여 고령비중이 현재 약 3.7배나 증가한 한편 UNPD(2013) 조사결과 합계출산율(TFR)은 1.23명으로 세계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높은 고령인구와 낮은 출산율로 2036년이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 이에 따른 소비주체의 감소,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수지 악화는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노동투입의 양적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노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 후 일을 하며 육아를 감당해야하는 문제와 쉽지 않은 재취업으로 고학력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60%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조하현, 세계일보 시론 2014년 2월 11자).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큰 손해다. 따라서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 후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이 구축되어야 한다. 육아를 하면서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인증된 보육시설의 설립과 보육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출산과 일의 병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편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은 출산휴가가 480일이 주어지는데 이 중에서 60일은 의무적으로 남편의 몫이다(김주현, 2014 : 14). 60년대 중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은 후, 스웨

텐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한 가정 당 평균 1.6~2.2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김주현, 2014 : 13).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6.2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새로이 만들어질 출산·육아 제도를 부부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뿐 아니라 고령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져 은퇴 후의 '제2의 인생설계'가 중요해졌다.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하며, 우울증 환자의 34.5%가 60세 이상인데다가 이들의 자살률은 젊은층의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면 노동을 통해 정체성을 되찾아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실버인력이 은퇴 후에도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매칭시스템 구축 등 활발한 전직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R&D투자로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다. 노동생산성 1위인 독일의 예를 들면, 폭스바겐은 경기와 상관없이 매년 매출의 5%를 R&D투자에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이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6.5%로 한국의 2배가 넘는 독일은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며 수출점유율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제조업이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정책일 것이다(조강욱,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25일자).

셋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 한계생산성 체감법칙에 따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단일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노동의 양적투입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국가에서는 노동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의 인적자본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

물론, 대학졸업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여전히 저조하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교육의 수요충족도 조사결과, 미국 10위, 일본 36위에 이어 한국은 46위에 머물렀다. 이는 대졸자의 경쟁력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노동생산성 1위인 독일은 중고생들의 60%가 학교와 현장이 결합된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한다. BMW의 경우 매년 800명의 인턴을 훈련시켜 전문기

술을 전수하고, 졸업 후에 바로 고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재를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알맞은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률을 낮추어 결국 경제성장을 돕는 선순환을 제공한다(조강욱,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25일자). 따라서 우리도 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신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양성하여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인력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영세한 기업에게는 정부의 적절한 보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자본생산성 측면

성장률 둔화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고정투자의 축소 등으로 인한 자본생산성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개월 연속 흑자인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회 총 저축에서 총 투자를 가감한 수치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 저축과 투자가 모두 활발한 상황에서 저축이 투자를 감당하고도 남는 경우는 정부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건전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반면, 투자가 저조하여 경상수지가 높은 경우에는 가계 소득도 감소,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가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현황은 두 번째에 속한다.

지난 투자성적을 살펴보면, 10년간 고정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24.1%는 물론 70년대의 17.9%와 비교도 안 되는 수치이다. 설비투자 증가율 또한 70년대 20%에서 2000대 이후 평균 1%대로 크게 하락한 후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어 이렇게 저조한 투자 현황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김주현, 2014).

따라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의 기초가 되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현 정부의 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강력한 투자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투자성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투자는 모두 하락한 반면 해외투자는 상승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국내가 아닌 투자 여건이 좋은 해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유출되던 투자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얼마 전 대기업의 높은 사내유보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후 쓰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돈을 의미하는데,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올해 500조를 넘어서 과거 2001년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폐지된 후의 8배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현재 공기업들을 포함한 전체 기

업이 내부에 보유한 현금은 503조 원으로 정부 예산의 1.4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2005~2011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비율은 22%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평균(4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전슬기, 사내유보금 과세...최경환, 1년 만에 입장 바뀐 까닭은?, 아시아경제 2014년 7월 17일자). 즉, 앞서 둔화하는 투자율 수치에서 본 것처럼, 내수 진작을 위해 힘쓰자는 정부의 주문에도 대기업들이 사내에 돈을 쌓아두고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미룬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목된 응답이 ‘불확실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책집행시 일관성 있는 행보가 각별히 요구된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조세, 토지비용, 노사관계, 행정규제, 주거환경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 고용창출, 가계소득의 증가, 민간소비확대, 재정확충,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회복시켜야 한다.

3. 총요소생산성 측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살펴볼 또 한 가지 측면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축 외에도 한 국가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총요소생산성(TFP)’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생산요소 투입량간의 시너지 효과,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생산요소에 의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사회자본 등 포괄적인 경제 환경이 반영된다.

가.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국내에서 서비스업은 연간 부가가치 창출의 50% 이상, 고용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백다미·주원, 2014). 따라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가 총생산성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지난 14년간 적자를 지속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고, 한류 관련 콘텐츠 수출의 확대로 개인·문화·오락 서비스가 수출특화와 비교우위로 들어섰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소식이나, 아직까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성적에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있다.

우선, 이러한 성적은 운송, 건설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흑자 덕분이며, 산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매출 10억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측정한 취업유발계수가 2010년 18.3명에서 2012년 18.0명으로 하락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운송, 건설

등과 같이 제조업을 지원하는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경기침체로 제조업 경기가 나빠질 경우 서비스 수출도 동시에 악화되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 2만 달러 대 수준에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서비스업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제조업 노동 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2004년 67.3%에서 2013년 47.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하태형, 2014).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경제가 성장하여 실질 부가가치가 1% 높아질 때 고용이 몇 %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탄성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고용은 0.66% 증가했다고 한다(황수경 외 5인, 2010 : 42). 제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고용은 오히려 줄었고, 서비스산업 성장에 따라 고용이 늘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제조업에 치우친 현황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면, 서비스업은 학력과 상관없이 취업유발 효과가 고루 높고 특히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 긍정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간 움직임이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백다미·주원, 2014).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화될 수록,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육성이 요구되며, 이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에는 기업,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 각각의 서비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2일 정부가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 진흥을 위한 대대적 규제완화 및 지원 방침을 내놓은 점은 환영 할만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인프라 보완이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비스 수출 업종 다양화, 서비스 수출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기술혁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을 빼놓을 수 없다. 90년대 이후, 한국은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깨달아 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3.37%의 수치로 OECD 국가 중 4위의 성적을 기록했다(김동렬·조호정, 2010 : 20).

그러나 아직까지 R&D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미국의 1/9, 일본의 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3국(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건수의 비중도 선진국 대비 낮다. 또한,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3대 산업에 쏠려있어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국가 별로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2007년도 미국 1.8배, 일본 3.5배에 비해 한국은 0.4배로 낮은 수준이다(김동렬·조호정, 2010 : 20).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하며, 신성장동력을 찾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위한 신기술개발이 촉구된다.

다. 노사관계와 경영체제

독일은 노동 생산성이 세계 1위이다. 물론 이렇게 높은 성적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56위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노사관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 간 양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급급하다. 전체를 위한 '선'보다는 나의 '이익'이 훨씬 우선한다. 반면, 독일은 지난 금융위기 때 노사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어 해고 없이 위기를 넘긴 저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독일의 이러한 저력에는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R&D 투자와 가족세습을 통한 장기적인 성과추구의 경영체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경영을 부의 세습으로 보아 부정적인 낙인을 찍고, 상속세를 최대 50%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에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어 사회전체후생을 감소시킨다. 물론 상속세 부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소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상속세 인상시 소득형평성은 개선되지만 모든 계층의 후생이 감소하는 하향평준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최명근·조경엽, 2006).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위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강국 독일의 이러한 해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조강욱,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25일자).

라. 부패방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2011년 5.4로 가장 청렴한 수준이 10이라는 점을 볼 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하며, 민간의 투자활력 저하시키고 사회전반의 신뢰수준을 낮춰 사회적 자본을 미흡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 세계은행(2007)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패널데이터 이용한 성장회계모형으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명목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약 0.65%p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만큼만 개선된다면 저성장의 침체기를 탈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한재진·이부형, 2012 :3).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부패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를 해야 한다. 이로써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 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NGO 등을 활용한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들을 보호하여 재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한재진·이부형, 2012 : 3).

IV. 결론

Mckinsey는 저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Wonsik Choi et al, 2013).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업종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최고치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일부 업종들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더 커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연구소에서도 현대·기아차 등의 성장세 저하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자동차 산업도 지난 5년간의 고도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권기석, 국민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수출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의 한계로 내수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못 미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 결국, 내수 부문 비중이 위축되어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외적 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우리경제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저성장이 지속되어 소비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었고, 일자리가 감소와 함께 경기가 둔화되고, 이것이 다시 저성장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급격한 환율절상은 수출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장기 저 성장세는 소비를 침체시키고 이는 경기를 둔화시켜 일자리가 감소하고 또 다

시 성장률이 저조한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장기 저성장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본래 4.1%에서 3.8%로 하향조정했으며, 국내외에서는 현재 3%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추후 2%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얼마 전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 한국경제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빗대어 ‘잃어버린 20년’이라 칭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개혁안을 내세웠다. 이는 위기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구원투수의 등장이라 할 수 있겠다.

새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은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여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투자여건 확충, 고용률 제고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얼마 전 DTI·LTV 완화도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일환이다.

물론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들이 모여 우리경제의 기초가 탄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재정적자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가계대출 증가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이로서 현재 저성장, 저물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세 가지 파도를 견디고 있는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현숙, “한국경제 이미 잃어버린 17년…경제규모 4단계 하락”, 경기일보 경제일반
2014년 8월 14일자
- 권기석, “2014년 현대·기아차 5년간의 고도성장 멈춘다.” 국민일보, 2013년 10월 18일자
- 김주현, “저 출산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한국경제연구원, 2014, p.14
- 김동렬·조호정,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0, p.20
- 백다미·주원,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
- 전슬기, “사내유보금 과세…최경환, 1년 만에 입장 바뀐 까닭은?”, 아시아경제 2014년 7월 17일자
- 조강욱, “위기의 韓제조업 독일에서 해법 배워라”,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25일자
-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균등을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 하태형, “서비스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
- 한재진·이부형, “부패와 경제성장”, 현대경제연구원, 2012, p.3
- 황수경 외 5인,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0, p.42
- 허문구 외 3인, “인구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14, p.9
- Wonsik Choi et al, “Beyond the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MGI
Worlds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Fertility Data, UNPD, 2013